

#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2

##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2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5월 30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양종각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 [ 안내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http://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Contents

Vol.82

2

##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행안부,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산광역시, 4월 15일부터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전면 시행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공포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정·공고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충청북도,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8

##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행안부, 경북·강원 산불피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 확정  
문화재청,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고밀·복합개발, 녹지 확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발표  
부산광역시, 제2에코델타시티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범도시 모델 제시  
인천광역시,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라북도,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 2027년까지 조성계획

16

##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9월부터 본격 시행  
국토부·산업부, 경북·대전·전남·충남·충북,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문체부, 첫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 선정

농림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 전남 화순, 경북 성주 선정  
산림청, 전국 어린이집 대상 '국산목재 실내 환경 개선사업' 20개소 공모  
행복청, 세종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설계 착수  
서울특별시,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92억 투입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해 대중교통·보행 이용환경 개선  
대구광역시, '대구형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 시·자치구·기관, '깨끗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광주 만들기' 추진  
대전광역시, '2022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뽀뽀한 사랑방' 건립 돌입  
충청남도,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실시  
충청남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 선정  
경상남도,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

---

##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32

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국토부,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산림청,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리시스템' 사업구축



#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4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행안부,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자치분권제도과. 2022.04.06.

도시  
정책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의 후속 조치이다.

\* (대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2년 연속 인구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市(‘21.12월 말 기준)

‘특례시 지원협의회(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 합동)’를 구성하여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도(경·가·청·남·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하였다. 그 중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이 완료되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것이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됨

### [특례시의 추가 특례 기능]

특례 사무기능	관련 법률
지방 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산지관리법」
지방건설기술심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건설기술 진흥법」

## 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권익지원과. 2022.04.26.

건축  
정책

안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개정사항]

구분	바닥면적 기준	
	현행	개정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300㎡ 이상	5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300㎡ 이상	50㎡ 이상
이용원·미용원	500㎡ 이상	50㎡ 이상
목욕장	500㎡ 이상	300㎡ 이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500㎡ 이상	100㎡ 이상
일반음식점	300㎡ 이상	50㎡ 이상

## 부산광역시, 4월 15일부터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전면 시행

건설행정과. 2022.04.13.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4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km당 4분) 내 연속통행하면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 할인대상 유료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임

하이패스 차로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차로는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료도로법의 중복할인 금지 규정에 따라 이미 다른 할인을 받은 차량은 연속통행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부산항대교~천마산터널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결과 연속통행 할인을 받기 위해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출퇴근 시간 등 차량정체 시간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km당 4분 이내로 개선하였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공포

도시경관건축과. 2022.04.21.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

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확대했다.(기존 50명→60명)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에너지정책과. 2022.04.2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인천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에 정의된 자동차를 말하며,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는 13,841대의 전기차(12,820대)와 수소전기자동차(1,021대)가 등록돼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급속충전시설이 확대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충전 만족도가 향상되고 충전사각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확대 (100개 이상 → 50개 이상)</li> <li>-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확대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li> </ul>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시설의 총 주차면수 확대(1%→5%)</li> <li>- 기축시설은 총 주차면수 확대(2%로 상향)</li> <li>*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 설치</li> </ul>
급속충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시설은 전체 충전시설의 5% 설치</li> <li>- 공영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 설치</li> </ul>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정·공고

주택정책과. 2022.04.12.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근 확정·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6가지 이다.

-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②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활성화 조항 및 공사추진 시 입주자등이 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 ③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사항 반영
- ④ 해킹 공격 등 사전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취약점 개선 노력 조항 마련
- ⑤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실비 정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관리비 횡령논란 사전 방지
- ⑥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한 선출공고, 대규모 공사추진 등 주요 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등의 지급과 관련해 관리업체와 계약 시 실비정산 항목을 명시해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지급 금액 정산 여부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토지정보과. 2022.04.29.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1년 4월, 1년간 재지정한 바가 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 충청북도,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지정보과. 2022.04.08.

건축  
정책

주택  
정책

충청북도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4월 8일 공포하였다.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한요율을 국토교통부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 행안부, 경북·강원 산불피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4.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261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20,523ha(잠정)가 산불로 훼손되고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개소 등의 사유시설과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확정된 복구비는 총 4,170억 원으로,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복구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하여는, 여름철 장마나 호우로 산불피해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의 피해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긴급벌채비용 53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 계곡부는 계류보전(5.85km)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이번 산불은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던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상태가 한 달여간 지속된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 문화재청,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고도보존육성과. 2022.04.12.



문화재청은 역사문화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년 6월 제정, 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비전과 방향, 역사문화권 정책의 안착을 위한 기반조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여 역사문화권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고대의 역사문화, 오늘의 유산, 미래의 자산’을 정책비전으로,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국가경영(거버넌스) 형성’을 목표로 하여 5년간 추진해 나갈 6개 정책 대과제, 15개 중과제, 34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②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연구, ③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 유형 추진, ④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산업활성화 촉진, ⑤ 시민참여와 활동 유도, ⑥ 전문인력 강화와 국제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세계유산정책과. 2022.04.11.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세계유산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한다.

이번에 수립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21.2.5.)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세계유산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하다’라는 비전 아래 4개 전략과제와 16개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통합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전략과제 및 핵심과제]

구분	핵심 과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잠정목록 다양화, 지속적으로 등재를 확대</li> <li>- 등재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li> <li>-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내에 도입</li> </ul>
포괄적 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보고·정기점검 체계 마련</li> <li>- 세계유산 등재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통합적 관리·활용이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운영</li> <li>- 세계유산 국내 협력관계(네트워크)를 강화</li> </ul>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과 문화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전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홍보 활동</li> <li>-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제작·보급을 추진 계획</li> </ul>
세계유산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의 남북 공동등재 추진 등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li> <li>- 세계유산 관련 역사 갈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관리와 국제적 협력관계 역량을 강화</li> </ul>

## 서울특별시, 고밀·복합개발, 녹지 확대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발표

도심권사업과. 2022.04.21.



서울특별시는 고밀·복합개발과 녹지공간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서울도심을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21일 발표하였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기존 건축규제(건축물 높이(90m 이하), 용적률(600% 이하) 등)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심 녹지율을 3.7%→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특히,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상업·문화시설과 주거공간이 함께 들어와 365일 활력 넘치는 ‘직주근접 정주도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되어 변화가 시급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부터 재정비를 시작한다. 이후 동-서로는 1가~8가, 남-북으로는 울곡로~퇴계로까지 서울도심 전체를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어 하늘에서 보면 온통 녹색으로 물든 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녹지생태도심 실행전략’ 및 녹지공간 확보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신규 정비구역	- 종묘~퇴계로, 동대문·DDP 일대 등 아직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들로, 고밀·복합 개발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기시행 정비구역	- 광화문~시청 일대 같이 이미 재개발이 끝난 구역으로, 공개공지 재구조화나 벽면녹화, 입체녹화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
특성 관리구역	- 한옥밀집지역이나 인사동·명동 같이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장소에 따라 녹지보행가로나 거점형 녹지센터 등을 조성



[녹지공간 확보전략]



[통합구역 재개발시 녹지공간 확보방안]

## 부산광역시, 제2에코델타시티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범도시 모델 제시

도시균형개발과. 2022.04.05.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부산광역시가 강서구 김해공항 서측 일원 약 320만 평 부지에 조성 예정인 ‘제2에코델타시티’에 교통과 환경 부문을 우선 조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범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철도,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을 다른 공사보다 우선 시행한다. 신교통(트램), 도로, 수질 개선, 공원녹지 등을 우선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환경가치와 공공시설 서비스를 제고하고 교통과 환경을 우선하는 친환경 수변도시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교통인 도시철도 강서선(트램)시설을 우선 조성해 15분 생활권 도시를 실현하고 도시철도 3호선 및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단~녹산선을 조기에 연결하는 계기로 만들고, 제2에코델타시티를 남북으로 잇는 광역도로도 조기 건설해 7개의 동서축과 연결하는 초광역 연결망을 이룬 시일 내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부지 내 도심하천인 평강천과 맥도강에 낙동강 본류수(2등급)를 유입시켜 물순환 강화를 통한 수질등급 개선(4등급 → 2등급)에 나서고, 폭 100m, 길이 5.5km의 서낙동강변 녹지축을 조성·연결해 철새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4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산시는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조·지원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는 개발계획의 수립, 공사 발주, 용지 분양 등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3개 기관은 협약 이후 바로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섬발전지원과. 2022.04.1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개발정책과 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인천에는 168개 섬이 있으며, 그 중 유인도 40개 중 개발대상 섬은 32개이다. 인구수는 20,934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섬은 백령도(5,281명), 교동도(2,901명), 석모도(2,136명) 순이다. 섬의 전체 면적은 256.2km<sup>2</sup>로 인천시 전체면적의 24.5%를 차지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을 비전으로 ① 살고 싶은 섬, ② 삶의 터전인 섬, ③ 지속가능한 섬 전략이 제시돼 있다. 기반시설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섬의 개발정도, 자원, 인구특성, 산업기반, 정주환경 등을 영역별로 평가해 섬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섬 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이 계획수립에 참여해, 분야별로 정주환경 11건, 지역경제 10건, 교통 및 접근성 11건, 문화관광 10건 등 총 42건의 사업을 계획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395억 원의 예산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계획수립을 통해 섬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제복지 발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강화·옹진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소멸지역 대응정책의 역할을 통해 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 고시

재생콘텐츠과. 2022.04.25.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는 중구 송학동1가 8-3번지 일원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시보에 4월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사업은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인천시민愛(애)집, 이음1977 건물 등과 연계해 인근지역 사유지(유희지)를 매입해 역사산책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12월까지 1,960.2㎡ 면적에 총 74억 원(토지보상비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책로(정원), 쉼터, 문화공간, 웨딩촬영장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2020년에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2021년에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신규 결정됐으며, 이번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이 고시됐다.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현장]



## 전라북도,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 2027년까지 조성계획

투자금융과. 2022.04.01.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수행능력과 입지수요를 검증받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은 김제시 상동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712억원을 투자하여 895천㎡ 규모로 조성계획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도는 전주시, 김제시와 지평선 제2일반산단을 탄소산업 육성과 전주시의 부족한 산업입지를 대체하기 위해 전주 탄소국가산단과 연계한 탄소 소부장 협업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과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에너지 융복합 산업도 창출될 전망이다.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 조성으로 인해 3,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36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 조감도]

##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월부터 본격 시행

청년정책과. 2022.04.21.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시·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대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 / 약 15.2만 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li> <li>*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amp;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li> </ul>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li> <li>- 지급 : '22년~'24년(약 3년)</li> </ul>
총사업비	- 총 2,997억 원 (국비 1,366억 원, 지방비 1,631억 원)



## 국토부·산업부, 경북·대전·전남·충남·충북,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산업입지정책과. 2022.04.27.

건축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6일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거점산단)'으로 경북(포항국가산단), 대전(대전산단), 전남(대불국가산단), 충남(천안제3일반산단), 충북(청주산단) 등 5곳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현황: '20년 5곳, '21년 5곳, '22년 5곳 등 총 15곳

산업단지 대개조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국토부·산업부 등 12개 중앙부처는 5개 지역의 혁신계획 추진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부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5개)의 혁신계획]

구분	주요 내용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그린철강 기반 청정금속소재 산업 허브 구축</li> <li>- 저탄소 철강산업 공정기술 지원,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등의 핵심사업을 추진</li> </ul>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산단을 거점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K-제조업의 신성장 거점 구축</li> <li>-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R&amp;D, 노후산단 재정비 등 핵심사업을 추진</li> </ul>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불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허브로 도약</li> <li>-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산단 산재예방 통합지원센터,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등 핵심사업을 추진</li> </ul>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제3일반산단을 거점으로 미래차 소부장 그린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글로벌 전진기지로 도약</li> <li>- 대중소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지원, 미래 모빌리티 기술창업타운 조성 등 핵심사업을 추진</li> </ul>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산단을 거점으로 지능형 융합기술을 통해 소부장 산업 글로벌 기술거점을 구축</li> <li>-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R&amp;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등 핵심사업을 추진</li> </ul>

## 문체부,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 선정

관광정책과. 2022.04.08.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안전

문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관광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 민간시설과의 협업 등을 통한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과의 연계성 강화에 역점을 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심사과정을 통해 관광 매력도, 사업추진 역량, 민관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강릉시 1곳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3개년 동안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성공 비결이 있다는 점 역시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강릉시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비롯해 강릉시가 성공적인 무장애 관광도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상담, 무장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강릉시는 연차별로 ①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② 관광시설(숙박·식음료, 쇼핑 등 민간시설 포함) 접근성 개선, ③ 무장애 통합관광정보 안내, ④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농림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 전남 화순, 경북 성주 선정

농촌사회복지과. 2022.04.28.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 화순군과 경상북도 성주군을 선정하였다.

농촌 돌봄마을은 사회적 농장,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교육센터 등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22~'24년까지 3년간 국비 182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선정 공모를 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전라남도 화순군과 경상북도 성주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와 지역 내외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마을 조성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폐광기금의 활용, 돌봄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 성주군은 지역의 돌봄 수요와 자연·환경 등 입지 여건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였고,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농식품부는 돌봄마을 시범단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등 농촌 재생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전국 어린이집 대상 ‘국산목재 실내 환경 개선사업’ 20개소 공모

목재산업과. 2022.04.06.

건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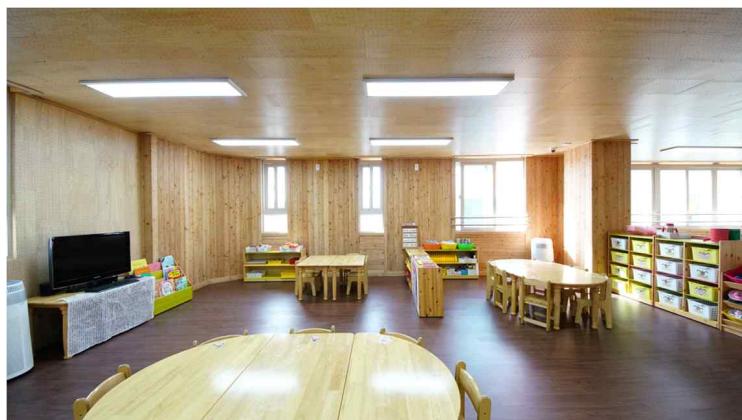
환경

산림청은 어린이들이 국산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4월 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산림부서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서울 목원초등학교, 대전 노은초등학교 등 4개 초·중등학교에서 교실환경을 목재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목재를 활용한 실내 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430㎡ 이상,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목재 이용 실내 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http://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복지시설 실내나눔숲) 실내환경 개선]

## 행복청, 세종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설계 착수

도시성장촉진과. 2022.04.04.

건축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해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했다.

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교사와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함께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정부혁신을 구현할 미래형 신개념 대학으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여 행복도시 4-2생활권에 조성 중이다. 지난 3월말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 중으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행복기숙사는 공동캠퍼스 부지에 약 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며, 입주자 편의와 다목적 활용을 위한 공용공간과 1인실·2인실 등의 사생실로 구성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는 연합기숙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전액을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 국·공유지에 국·공·사립대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기숙사

## 서울특별시,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92억 투입

주거환경과. 2022.04.07.

건축  
정책

주택  
정책

서울특별시가 올해 총 92억 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집수리 보조·용자 사업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그 외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용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4월 7일 집수리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고,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민들은 공고 이후 3주간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전평가 및 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한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도 계속 실시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만 집수리 보조금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착수 신고 전에 등록절차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해 대중교통·보행 이용환경 개선

교통정책과. 2022.04.19.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안전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보행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정책이 시민 생활과 연계가 깊은 만큼, 교통 분야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하철의 승강 편의시설 설치, 저상버스 도입,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 구축, 콜택시 가동률 향상, 점자블록 정비 등을 추진한다.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지하철	- 승강 편의시설 설치 등 ‘1역사 1동선’ 확보 (엘레베이터 설치 99.4% → ‘24년까지 100%)
버스	- 저상버스 도입률 ‘25년까지 100%(전 노선 6,564대) ( 시내버스 )’21년 511대 시내버스 추가 도입으로 74.8%까지 증진 ( 마을버스 )’21년 71대 도입, ‘25년까지 73개 노선 235대 도입 -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스마트 앱을 통한 버스 예약, 탑승 시 자동음성 서비스, 하차벨 공용리모컨 지원 등 ) * 2022년 내 경복궁역 경유 1711번, 7212번 2개 노선을 대상으로 6개 정류장에서 시범운영 추진
콜택시	-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32분→25분) - 운전원 증원을 통한 가동률 10%이상 향상 - 차량대수 증차를 통한 법정대수의 기준충족률의 114%까지 향상
보행이동편의 증진	- 횡단보도 접한 보도상 진출입부의 점자블록을 정비 - 경계석 턱낮춤을 통한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개선 - 음향신호기 600대 추가 확대 설치 (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 지역, 사회복지관 등 이용 시설 주변 중심 설치 및 신호등 신규 설치 시 음향신호기 의무화 )



[장애인 콜택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 대구광역시, ‘대구형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 본격 추진!

민생경제과. 2022.04.03.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사업계획(‘21~‘25년)’을 수립해 작년부터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단계) 골목상권 기반조성 및 조직화, ▲(2단계) 골목상권 안정화, ▲(3단계) 골목상권 특성화 및 자생력 강화 등 3단계에 걸쳐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대구광역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3단계 사업인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각 지역 10개소 골목상권 중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 ① 달서구 이곡으뜸 먹거리타운, ② 남구 물베기 골목 2곳을 최종 선정했다.

달서구 이곡으뜸먹거리타운(이곡으뜸상인회)은 18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서 지역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식으로 점포들이 즐비해 있다. 주택단지와 인접하고 성서공단 근로자 등 잠재고객이 많고 대중교통 이요이 편리해 향후 잠재력이 높은 상권이다.

남구 물베기 골목(물베기상인회)은 작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결성된 신규 골목상권으로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와 경북예술고등학교,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음악·예술 관련 업종과 먹거리가 공존하는 상권이다. 향후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각 골목상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골목닥터 자문단’을 활용,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 시·자치구·기관, ‘깨끗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광주 만들기’ 추진

정책기획과. 2022.04.20.



광주광역시, 자치구, 사업소가 기업·시민들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특수시책으로, 광주만의 특색 있는 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시민과 함께 광주천·영산강·황룡강 등 국가 하천 주변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환경공단과 시민들이 계절에 맞는 꽃을 식재하는 등 하천 주변 꽃밭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며, 환경 정화활동과 주변 시설도 상시 점검해 시민들에게 연중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관내 도심공원 64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예·제초 작업, 각종 편의시설 정비 등을 수시로 실시해 시민들이 1년 365일 언제나 쾌적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빔고을·효령 노인타운 등 어르신 이용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시립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본촌·첨단 등 노후 산단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개선도 이루어진다.

###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도시공간 조성사업]

구분	주요 내용
동구	- 간판 개선 등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서구	- 아름다운 도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정비사업 추진
남구	- 백운광장의 주·야간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북구	- 제42주년 5.18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참배환경 조성 추진
광산구	- 상무대로 경관개선사업 추진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해 아름답고 매력 있는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골목 둘레길 만들기(동구), 농성골 벽화(서구)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각 마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전광역시, '2022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과. 2022.04.01.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대전광역시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 빈집정비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유해성이 높은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총 33호의 빈집을 정비(철거 등)하여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도 3억 원의 예산을 5개 구에 각 6천만 원씩 교부하여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만큼, 자치구에서 정비하는 이번사업에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은 1등급(양호한 빈집), 2등급(일반 빈집), 3등급(불량 빈집), 4등급(철거대상 빈집)으로 분류된다.



[빈집 정비 후 공용주차장 이용 사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변암리에 '뽐뽐한 사랑방' 건립 돌입

도시재생과. 2022.04.14.

건축  
정책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읍 변암리 90-1번지 일원에 소규모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뽐뽐한 사랑방' 건립에 돌입했다.

변암리 사업지구는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0%에 이르는 곳으로, 시는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복지거점시설을 마련하기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뽐뽐한 사랑방 건립을 준비해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뽐뽐한 사랑방은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비 41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1,478㎡ 규모로 조성한다.

뽐뽐한 사랑방은 노인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건강증진센터부터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장,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다기능 시설로 구성된다.

시는 향후 주민 사회적경제조직이 뽐뽐한 사랑방 운영을 맡아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 역량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치원읍 변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살아왔고, 살고있고, 살아갈 사람들의 편편하고 번듯한 뽐뽐한 마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022년까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뽐뽐한 사랑방' 조감도]

## 충청남도,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실시

건축도시과. 2022.04.10.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안전

충청남도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며,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보조사업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시설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당 총공사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666만원이 지원된다.

보강방법은 외장재로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보조사업 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용자사업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마감재로 교체 등을 할 수 있고, 호당 4,000만 원 한도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연 1.2%)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소재지 시군 건축물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충청남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건축도시과. 2022.04.27.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충청남도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운영 등 한시적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미등록한 고정광고물로, 돌출 8,112개, 벽면 7,920개, 지주 6,853개, 옥상 442개, 기타 756개 등 총 2만 4,230개이다.

도는 자진신고 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철거 또는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광고물 변경 또는 철거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단, 자진신고 하지 않은 불법간판은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통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 등 적발 즉시 행정제재를 가한다.

불법 옥외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원하는 소유 관리자는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

건축주택과. 2022.04.1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2022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김해시 2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역의 공공건축·공공공간의 품격 및 품질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경상남도에서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분야에 창원시가,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분야에 김해시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창원시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 5천만 원, 김해시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용 5천만 원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지원받아 경남의 공공건축품격과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의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공공건축가제도를 시·군 단위까지 구성해 운영 중이다.

## 경상남도,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건축주택과. 2022.04.21.

건축  
정책

주택  
정책

경상남도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예산 16억 원 (도비 8억 원, 시군비 8억 원)을 투입해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작년에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 1,424명에게 18억 8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월1,167,000원/인) 초과 150%(월2,917,000원/인)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개로 정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생애 1회에 한하여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국토정책과, 2022.04.19.

도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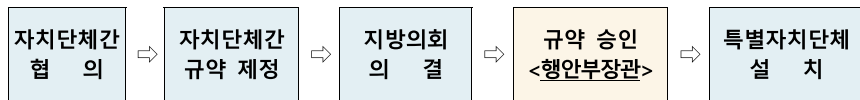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아울러,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별지자체 설치 주요 절차(지방자치법 제199조)]

행정안전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주택건설공급과. 2022.04.25.

건축  
정책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 단체 사건 신청 시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류 발생으로 재입력·사무국 직원 도움 요구,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필수 기재사항을 직접 입력, 모바일 서비스 미 제공, 우체국 송달 처리로 인한 사건 처리기간 지연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는데 이번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내용]

문제점	개선 내용
단체 사건 신청 시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	-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 - 신청된 내용의 사건별 자동 구분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 미연계로 필수 기재사항 직접 입력	-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 상의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 하여 편의성 향상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출석통지 등 우체국 송달처리로 처리기간 지연	- 현장실사 일정 통지 등 전자우편으로 처리 가능 - 신청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요청 기반 구축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류 발생	- 시스템 노후화 개선

## 산림청,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산지정책과. 2022.04.01.

국토  
정책

환경

산림청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 '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함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구분도(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지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보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 제주도, ‘마을만들기사업 관리시스템’ 사업구축

자치행정과. 2022.04.18.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만들기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을 선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관리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전산화 작업으로,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시설물 관리 현황은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주도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관리 절차]

구분	주요 내용
1차	- 마을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반기별(또는 연1회) 자체 실태조사서를 등록(제출)
2차	- 시에서는 실태조사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 도에 제출
3차	- 도는 운영실적 부진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와 합동 점검해 운영부진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진단해 행정시에 점검결과를 환류
4차	- 중앙공모사업 시설물인 경우 중점관리시설물을 선정·집계해 중앙에 보고하고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과 환류 이력 관리 및 통계 처리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ISSN 2635-5140